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절실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정해 국방부가 주도해야 이용빈·김진표 의원 등 4건 국방위 회부...국가가 직접지원 근거도 마련

광주·전남 갈등의 아이콘이 돼 버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무안, 해남 등에서 '되짜'를 맞은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물론 전남도 등도 현 '기부대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있다. 현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국방부의 책임감이 결여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 대구 등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와 수원, 대구 등에서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에 투입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난개발을 전제로 한 후진적인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과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데다, 이전사업을 직접 챙겨야 하는 자치단체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아파트 건설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현 군공항 부지 820만㎡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 7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신 군공항 조성에 4조1000억원, 중전

부지(군공항 이전 후 공유지) 정비에 8300억원, 금융비용에 3800억원 등을 지출하고, 남은 돈 4500억원을 이전 대상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아파트 과다 공급, 난개발, 구도심 쇠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에게 피해만 안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수원시, 대구시 등에서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나 서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와 수원, 대구 시민단체 연대인 '군공항이전 시민연대'는 지난 16일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했다. 추진위는 청원문에서 "군공항은 군사시설이고, 이전 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수인 만큼 현행법 한계 등 법률 검토를 통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대규모 군사 시설 이전을 종전 부지 지자체에게 맡기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광주시와 수원시, 대구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 등이 3건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폐지됐고, 21대 국회 들어 이용빈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다시 국방위에 회부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건에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군 공항 이전지역인 광주시와 수원,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대구만 이전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대구 공군기지는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이전하는 계획이 지난 8월 확정됐다. 다만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자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제는 풀어야 한다"면서 "수원, 대구 의원들,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왕이 中외교부장 접견 시진핑 주석 연내 방한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그동안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신속통로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또 인적 교류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국제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왕 부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인사를 전하고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관심 속에 양국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양국이 코로나를 견뎌내면서도 더 넓은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 우정, 상호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구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왕 부장은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통제돼야 시 주석의 방한이 가능하다"고 강조, 연내 방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평수·임대기간 늘린 질 좋은 공공임대 '광주형 평생주택' 2024년 첫 입주

내년부터 시범사업 500호 건립 2030년까지 1만8000호 공급

광주에서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오는 2024년 500세대가 첫 입주한다.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가 입주대상으로 주거면적과 임대기간을 대폭 늘리고, 생활편의시설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첫 공공주택이다. 광주시는 이를 '광주형 평생주택'으로 이름 짓고 오는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투기수요와 신규수요 증가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

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분양주택보다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지 내 생활기반시설과 공공편의인입,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이 시장은 말했다.

먼저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 이하)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했다. 또 입주예정자를 설계부터 입주 후 아파트 관리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 맞춤형 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인 공동운영을 통해 폐

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총괄·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설계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상가형 아파트에서 탈피해 우수한 디자인의 품격 높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스마트, 녹색건축물로 조성해 공동주택분야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건설 과정에는 자재, 인력, 장비 등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 건설경기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도심 내 공공소유 부지에 500호를 건립해 2024년 초에는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 광주형 평생주택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재원은 국비와 주택도시기금에서 66%, 사업시행자가 20%를 부담하고 입주자가 나머지 14%를 부담해 마련한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광주의 특성을 더해 '광주형 평생주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겠다"며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가 집 걱정없이 살아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